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구체적인 공적연금 재정계산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내년은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를 시행하는 시기이다. 2003년에 처음 시행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는 올리고 급여수준은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채 벌써 제2차 재정계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공무원연금도 1995년 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같이 최소 5년 주기로 재정계산을 도입하고 2005년에 제1차 재정계산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재정계산의 개념조차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공적연금별 제1차 재정계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공적연금은 장기보험제도이므로 장기에 걸친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제도를

운영하다보면 어떤 시점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게 연금제도를 개선하였다 하더라도 연금제도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게 되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금재정에 대한 장래 수지를 재검토하고 재정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공적연금제도를 이미 오래 전에 도입하여 성숙단계에 진입한 선진국들도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한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이런 재정계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구체적인 공적연금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3년에 제1차 재정계산 시행 후에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합계출산율, 이자율 가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추계를 재실시해 줄 것을 지속

적으로 요구하였다.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문분야별로 재정추계모형 검토, 가정변수 설정, 재정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고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재정추계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에 대해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재정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조차 일반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경우 재정계산의 근거만 있을 뿐 재정계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이 결여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 재정계산의 구체적인 시행절차 및 포괄범위에 대한 지침 마련에

대한 정책수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나타내는 소위 “4不” 중 “노후에 연금을 못받는다”는 잘못된 오해가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공적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이런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연금재정을 평가하는 재정계산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재정계산제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재정계산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적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기본이 되는 제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를 앞둔 올해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김영민**